

서울서 교통사고로 하루 0.67명꼴 사망

지난해 246명 사망… 1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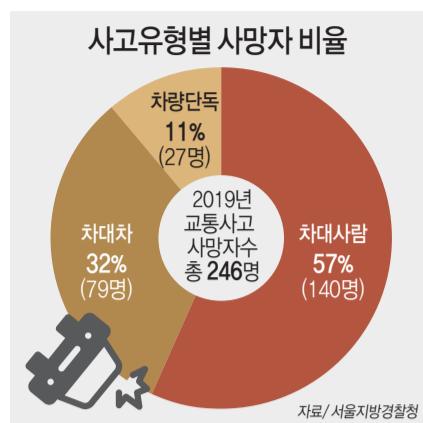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2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 시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보다 19.1% (58명) 줄어든 246명, 일평균 0.6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계를 시작한 1970년 아래 50년간 통계 중 역대 최저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0년 집계 시작 이후 1989년 137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2015년부터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0.96명)보다 줄어든 0.78명으로 조사됐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2.4명으로 2018년(3.1명)보다 줄었다.

차대 사람 사고(보행자) 사망자는 전년 184명보다 22% 감소한 144명이었다. 사망자 중 100명(69%)은 무단횡단과 같은 보행자 과실로 인한 사고였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2%에서 지난해 59%로 3%포인트 줄었다. /김현정 기자



‘아침부터 으쌰’… 기동민 의원 쌀배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16일 서울 성북구 월곡2동 주민센터에서 ‘얼굴없는 천사’로 부터 배달된 쌀을 옮기고 있다. 월곡2동 주민센터는 2011년부터 10년째 이름을 알리지 않고 쌀을 기부해온 한 시민의 뜻을 기리기 위해 이날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연합뉴스

시민감시단, 작년 성매매광고 6.5만건 잡아

서울시 “10기 1000명 선착순 모집”

성매매 알선·광고,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고하는 정의의 사도들이 있다.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이다. 이들은 지난 해 동안 인터넷, SNS,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된 성매매 광고와 불법 정보 7만6600건을 모니터링했다.

서울시는 시민감시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온라인 사업자 등에 6만5202건을 신고해 4만 8473건에 대해 삭제·차단·해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모니터링 건수는 2018년 대비 45% 증가했고 신고 건수는 31% 늘었다”며 “감시단이 하루 평균 255건의 유해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해 얻은 값진 성과다”고 평가했다.

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10기로 활동할 1000명을 내달 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김현정 기자

미승인 화재감지기 유통업체 5곳 적발

서울시, 의심업체 15곳 불시단속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미승인 소방 용품 유통업체 5곳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6일 119광역수사대를 투입해 미승인 소방용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업체를 불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서



울 시내 업체 5곳을 입건했다.

이미 유통된 미승인 용품은 즉시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우리 일 아닌데”… 민원 떠넘기기 NO!

광진구, ‘핑퐁 민원’ 해결 나서

내달부터 ‘직원 배심원단’ 운영
감사담당관이 처리 부서 지정
일방적인 업무이첩 관행 타파

서울 ‘광진구형 실험’이 시작됐다. 광진구는 구청을 표류하는 ‘핑퐁(떠넘기기) 민원’ 해결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민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직원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직원 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은 부서 간 연속된 이송으로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가 마련한 대책이다.

‘핑퐁 민원’은 ▲민원 내용이 어느 부서 업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겹치는 경우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다른 부서로 이첩하려는 민원 처리 관행 ▲민원인이 까다로워 피하고 싶은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구는 “소관이 불명확한 복합 민원

을 효과적으로 조정해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함께 일하며 배려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는 6급 40명 이내로 구성된 직원 배심원단을 운영한다. 부서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자를 우선 선별하고 전문성을 고려해 부서장이 추천한 인물을 배심원단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주민으로부터 민원 진정이 접수되면 구는 감사담당관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소관 업무가 아닐 경우 해당 부서는 ‘민원검토서’를 작성해 감사담당관에 제출하게 된다. 민원검토서는 상대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작성해야 한다. 일방의 관점에서 업무를 이첩하는 관행을 없애고 부서 간 바른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구는 설명했다.

소관부서를 재지정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조정되지 못하면 배심원단

회의가 소집된다. 안건 발생 시 구는 배심원단 중 7명을 선별해 감사담당관 주재로 회의를 연다. 배심원단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 민원 처리 주무 부서가 결정된다.

구는 “직원 배심원단 결정을 불수용해 2차 민원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서울 광진구 외에 구로구, 강북구 등에서도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구로구는 복합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무원 배심원단 제도를 운영해왔다.

구로구는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상위 10%에만 주어지는 ‘가’등급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경기도 산하 20개 공공기관 청렴도 ‘뚝’

종합점수 8.49점으로 0.19점 하락
4개 기관 2등급 부여 받아 ‘상위권’

경기도는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49 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종합청렴도 점수인 8.68점보다 0.19점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15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아래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는 현 정원수 50인 이상 기관과 이하 기관 등 총 2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청렴도 점수를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정원수 50인 이상인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64점(표준편차 0.50)으로 집계

됐다. 항목별 점수를 보면 외부청렴도 9.32점, 내부청렴도 8.33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8.29점 등이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9.39점 이상을 받아야하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기관이 ‘2등급’을 부여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3등급을 받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평생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중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원수 50인 이하 10개 기관이 참여한 2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28점(표준편차 0.69)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 9.46, 내부청렴도 7.71, 부패방지시책평가 7.34점 등이었다.

1그룹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2등급을 받았다. 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체육회 등 5개 기관이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직장 내 갑질금지, 공익침해행위, 공공재정 집행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마련되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19.1.5), 경기도 공의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19.1.14), 공공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19.4.16) 등 법적기준이 마련되면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률 등 도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경기도 “일제 창지개명 뿌리 뽑을 것”

경기도가 도내 3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 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인 160곳이 당시 고유의 명칭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고자 창지개명 뿐만 아니라 창지개명도 했던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14년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우리나라 지명을 변경했다. 이 시기 전국 330여 개 군이 220개 군으로 통합됐고, 경기도는 36개에서 20개 군으로 축소됐다. 그 결과 과거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된 읍·면·동은 137곳(35%)이고, 해방 전이

나 해방 후를 포함해 지명이 변경된 읍·면·동은 228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제가 변경한 읍·면·동 지명은 160곳으로 전체의 40% 나됐다. 그 외에 일제강점기 이전 또는 해방 이후 행정구역 통합·분리 조정으로 변경된 읍·면·동은 68곳(17%)이었고, 33곳(8%)은 신규 행정구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경기도 전체 지명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 고유의 읍·면·동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지명에서 한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김승열 기자

시민 아이디어로 사업한다 서울시, 700억 규모 공모

서울시는 700억원 규모의 시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된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선정,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하는 제도다. 내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되는 사업 유형은 ▲광역제안형(300억원) ▲광역협치형·민주주의 서울 연계형(100억원) ▲구 및 동단위계획형(300억원)이다. 광역제안형과 광역협치형 사업은 2개 이상 자치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